

NEWS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강진 병영천에 '기후대응댐' 지어진다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각자 물려 받은 재산별로 과세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괄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1면 '담양군수 재선거'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준 전 청와대 행정관인, 조국혁신당에서는 3선 국회의원 정철현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영광·곡성에 이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野) 2당간 한 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광양 다 시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이돈건 광양마로라이온스 회장, 진보당 임기주 광양시위원회 부위원장, 자유동일당 박종열 광양시 당협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발을 누리고 있다.

고흥 나 구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주민자치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동귀 봉두농장 대표와 구의원 출신 무소속 김재열 고우리 법인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담양 라 구의원 선거구에는 고서면 주민자치회장을 지낸 노대현 민주당 담양지역위 상무위원이 단독 출마했다.

울해 4·2 재보선 공식 선거기간은 오는 20일부터이며, 28~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 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간격이 좁아 치러지지 않는다.

환경부, 병영천댐 등 전국 9곳 후보지 확정 화순 동북천댐, 지자체·주민 협의체서 논의

강진 병영천에 기후대응댐이 들어선다. 화순 동북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지속키로 했으며, 순천 옥천댐은 철거됐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강진 병영천댐을 비롯해 이미전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

(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이다.

정부가 새로 댐을 지을 곳을 확정하고 추진을 결정하기는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

예초 환경부가 제시한 '댐 후보지(안)'은 14곳이었는데 지난해 10월 주민이 반대하는 4곳을 빼고 10곳으로 추려졌다. 이후 지자체가 신청을 철회한 순천시

기후대응댐 추진 9곳 확정



댐 후보지(옥천댐) 1곳이 더 제외됐다. 후보지에서 빠진 5곳에 대한 향후 계획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위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로구 헌재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내주로 넘기나

변론 종결 후 15일째 평의 17일·21일 가능성 거론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재판관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헌재가 전날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비춰 21일 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15일간 재판관 평의

를 열고 사전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중 선고일을 공지와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할 계획이라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치고 18일이나 21일을 기일로 지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나온다.

대통령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인 17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수 있다. 헌재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사건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해 헌재가 21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을 보면 동북천댐과 지천댐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댐을 건설할지 말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댐 신설 여부를 논의 해야 한다는 지역 내 공감대가 있는 동북천댐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협의체에 환경부도 참가한다.

지천댐은 관련 기초지자체(청양군과 부여군) 간에도 찬반이 갈려 환경부가 참여하지 않고 충남도가 주관해 협의체를 꾸린다.

수입천댐과 옥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은 일단 추진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댐에 대해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북천댐이나 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댐 후보지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소동을 지속하겠다

는 것 외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엔 추진이 확정된 9개 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이 계획에서 제시된다.

댐 건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일러야 202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께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지리라 예상된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농업법인 114곳 불법 부동산행위 적발 광주시 감사위원회, 전체 983곳 관리실태 등 특정감사

광주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27일까지 지역 전체 983개 농업법인의 관리실태 등을 특정 감사한 결과, 부동산업을 하거나 의심되는 법인 등 114곳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해산명령 등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농지 불법 매매와 임대 등 부동산업을 영위한 40개 법인에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74개 법인은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농지를 불법 매매 또는 임대한 25개 법인의 115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확인했다.

이 중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은 과징금 96억원 상당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은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15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고우목적 사업에 전념하도록 추진 등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매출 없이 농지를 거래하는 등 2022년 8월 법 개정 이전에 부동산업

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74개 법인은 행정명령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고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은 14필지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실제 광주 남구에 등록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했다.

광주 동구에 등록된 B농업법인은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농업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이를 방치하다가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세 자료 등을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된 전국 첫 사례다.

행안부는 이를 높이 인정해 '2024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 국무총리상과 지방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력들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까지 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농업진흥이라는 고우목적 사업에 전념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업법인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고품질 파크골프채
국내 최고의 전문 생산 시설
뉴월드파크골프

지역 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중! ☎ 062) 515-9600

뉴월드만의 독자적인 헤드 제조 기술
(단 한 개의 나사도 없는 일체형 볼드 성형 기술 특허중 보유)

NEW WORLD 뉴월드 파크골프

☎ 062.515.9600

* 광주역광장에서 무등산쪽으로 150m